

山村地域의 資源保全과 管理

변 우 혁

고려대학교 임학과 교수

1. 序

산촌지역의 자원보전과 관리방안은 산촌개발의 기본방향 설정과 표리관계에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 산촌지역이 가지는 지형지리적, 환경자원적 특성상 개발이 먼저 있고 보전책이 뒤따라서는 아니되며 보전을 전제로 한 개발, 즉 환경친화적 생태개발이 되어야 하고 기반산업의 육성도 부존자원에 의존하는 방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산촌개발과 관련지어 가장 쉽게 생각되는 것이 휴양·관광분야일 것이다.

본 고에서는 산림자원의 육성이 지역간 균등한 관광효과를 내는 기초작업이라고 보며, 산림 주도의 산업구조 육성이 산촌진흥의 기본방향이라고 주장하면서 산림자원의 관리와 미이용 자원의 개발 및 인력유치 등이 연계되어서 임업이 미래산업으로 정착될 수 있는 몇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자연보호구역의 보전과 활용

1) 구역지정의 조정

산촌의 주요자원인 산림에는 10여개 부처의 48개 법률이 서로 얽혀 있으며, 그 중 야생동식물의 보전과 관련된 법률은 다섯 가지이다. 각 보호구역에는 지정목적이 비슷하여 구별성이 약하거나 부처의 이해가 관련되어 중복지정된 곳도 있고, 실제 관리할 조직과 인력이 없는 부처의 소관도 있어 관련법규의 상호조정 필요하다. 보호구역의 지정과 지구설정의 재조정이 필요하며, 충분한 학술조사와 토론 및 관리계획을 고려한 구역설정이 요구된다.

2) 보호와 활용의 연계

지금과 같이 보호구역이 방치되었을 때는 장애요인이 되지만 활용여하에 따라서는 귀중한 자원이 된다. 외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자연교육과 관찰이 주요 레저로 등장하면서 야생식물과 조수의 관찰, 사진촬영, 견학 등이 붐을 일으키고 있다. 지속적인 연구조사가 수행되어서 가치발견이 이루어져야하며, 이 둘에 대한 보전책에는 훼손없이 이용할 수 있는 보호지역 정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산림사업의 집약화

산림의 생산기능과 공익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림사업이 계획적이고 전문적·보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사유림경영은 거의 포기상태이며 정부보조금 범위 내에서 대충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유림

의 경우도 도로 가시권내는 어느정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오지산촌은 거의 방치되고 있으며, 비현실적인 단비로는 전문적 사업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형편이어서 과연 이런 상태로의 사업지속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산림사업과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강화되고 불합리한 점들이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조직체계로는 한계에 있으며, 또한 산림사업주체의 육성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와 같이 농산촌이 공동화되고 전문산림기술을 갖춘 기능인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는 올바른 산림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4. 미이용자원의 활용

우리나라에서 야생동물에 대한 가치는 생태적·심미적 가치에 두고 있으며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는 인식이 별로 없다. 그러나 야생동물은 관리여하에 따라서는 엄청난 경제효과를 가질 수 있는데, 이미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Revier System(엽구제도)를 도입하여 이를 실현하고 있다.

Revier System이란 야생동물의 소유권이 해당 토지와 연관되어 있는 수렵제도를 뜻하는데 이 제도는 야생동물의 보호·증식을 위하여 1848년 독일에서 시작된 제도로써 유럽 여러나라에 보급되고 있으며 임업 및 산촌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임지를 순수한 임업목적으로 경영하면 부수적으로 엄청난 경제 효과를 낼수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투자와 위험을 안고 임지를 굳이 초지로 개간하거나 임간 방목장으로 유도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사업과 야생동물 관리로써 천연목장화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5. 경관의 보전

산촌경관의 중심은 산림이다. 지금은 2~3년급의 동령림으로 구성되어 있고 목재가격이 낮아서 벌목이 안되고 있지만, 20~30년 후에 전산림이 벌기에 도달하고 목재가격이 상승된다면 과도한 벌채가 일어나 산림이 파괴되고 산촌 삶의 기반이 지난 50년대와 같이 또다시 붕괴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일시에 과도한 벌채가 이루어 지지 않도록 지금부터 영급구조를 개선하여 보속생산체제의 기틀을 마련하여야 한다. 불량임분은 갱신되어야 하고, 산림소유자별의 보속생산이 아니라 산촌별, 지역별 보속생산 개념을 도입한다면 미립의 유지가 가능하다. 또 수종별 구성에 있어서도 국유림은 전체의 조화를 고려해야 한다.

또 최근에는 생태·환경적인 경영이념이 산림경영에 도입되므로써 산림의 안정성과 다양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 및 지표가 국제적인 규약으로 마련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목재생산위주의 단순한 산림경영기업은 이와같은 새로운 산림경영이념에는 부합되지 못하며, 간벌 및 주벌생산량의 추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재적추정에 필요한 인자만 고려할 뿐 산림구조, 다양성 등의 산림환경 및 생태인자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는 이러한 종다양성 인자를 고려한 산림경영계획 기법의 도입과 이에 부합되는 사업체계의 확립도 산림경관·생태자원의 보전에 유익하다.

6. 結

산촌의 최대부존 자원은 산림이며 이의 지속적 이용여부가 산촌의 흥망을 지배한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열악한 산촌의 정주환경 개선과 산업기반조성은 국토자원 보전측면에서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요구되며, 그 지원은 장기적, 근본적 관점에서 또 전체지역에 미쳐 균형발전이 되도록 하며 산림의 조성과 관리에 높은

비중이 있기를 기대한다.

미래산촌의 좌표는 산림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 즉 국토문화, 국민건강, 임산물 생산과 생태적 안정성 등의 다양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이용체계를 구축하고 이것이 지속적이며 최대한 창출되도록 하는 산림자원 다목적이용의 보속성에 있다고 하겠다.